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 강현철
📄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실 과제감리단 선임연구위원
✉ hckang@klri.re.kr



👤 차현숙
📄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 본부장
✉ hscha@klri.re.kr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1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최초의 법의식 조사가 실시된 이래 총 다섯 번의 국민법의식 조사가 1994년, 2001년, 2008년, 2015년에 각각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비교·연구하기 위하여 「2019년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를 기점으로 2년마다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례화함과 동시에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을 확보하고자 하였다.¹⁾ 또한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의식 조사 설문문항에 대한 인지실험, 전문가 의견조사 및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구역 단위의 표본추출을 인구주택총조사에 기반한 조사구 조사로 전환하여 표본설계를 객관화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국민법의식 조사는 국민법의식의 인식과 양상을 분석하여 법의식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선진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어 왔으며, 2019년 국민법의식 조사도 역시 조사의 목적을 “법치주의의 정착”으로 설정하고 국제비교를 위한 기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II. 주요내용

1. 조사개요

국민법의식 실태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9월 2일(월) - 2019년 10월 4일(금)의 기간동안 태블릿 PC를 이용한 개별면접조사(TAPI)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3,441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2.5%p

- 1) “국민법의식 실태조사”로 2019년 8월 통계청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제456001호).
- 2) “법의식”에 대한 지수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지수로 설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인식지수”로 명칭을 선정하였다. 법치주의 인식지수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 행정부에 대한 인식, 입법부에 대한 인식, 사법부에 대한 인식 4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4점 척도 문항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측정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각 차원별 평균을 산출하고, 4개 차원의 평균을 법치주의 인식지수로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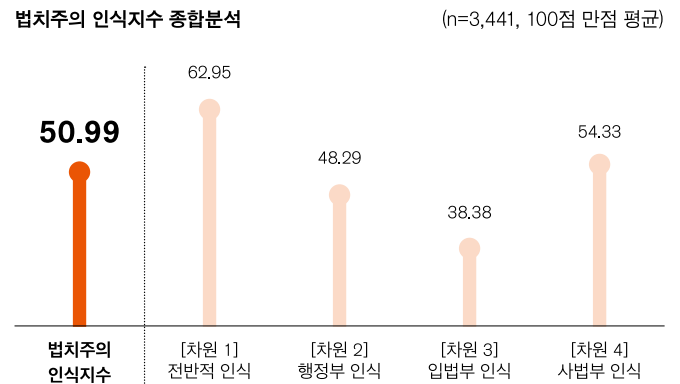
2. 조사항목

세부적인 조사 항목은 법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정서, 법의 준수, 법률정보 접근성, 법률서비스 접근성, 법과 사회 정의, 법 관련 교육, 법 생활, 법의식 지표, 정부, 국회, 사법부의 신뢰도, 성별, 연령, 소득 등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3. 주요 결과

1) 법치주의 인식지수²⁾

2019년 법치주의 인식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50.99점이며, 4개의 차원별 인식지수 결과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62.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법부에 대한 인식’(54.33점), ‘행정부에 대한 인식’(48.29점), ‘입법부에 대한 인식’(38.38점)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2)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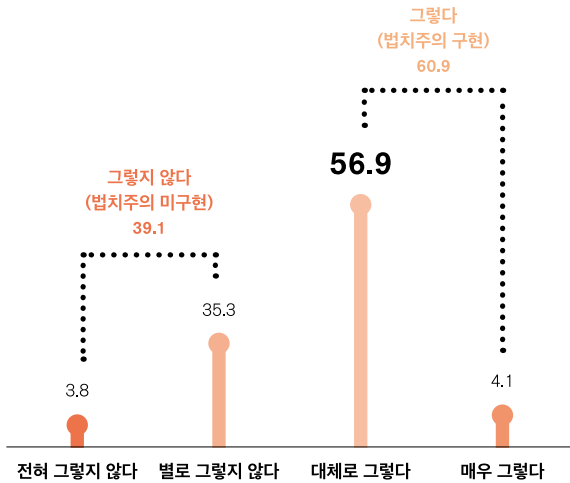
법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법률 해석 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잘 모르는 법률 내용을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해 본 경험은 29.3%로 높지 않게 나타나, 법률 내용의 이해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에서 법률 관련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아 법에 대한 평소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따르는 기준으로 ‘법률’과 ‘도덕/규범’이 유사하게 높았고, 다음으로 ‘관습/전통’, ‘권위/권력’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준법 수준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한 반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대해서는 60.9%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본인의 준법 수준보다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구현 정도 (n=3,441, %)



법치주의가 구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본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70% 수준으로 높아 국민들의 법 준수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 정보를 잘 제공하는 매체로 'TV/라디오'가 72.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포털사이트'(57.3%), '주위 사람'(43.6%), '인터넷법령·판례 검색시스템'(40.2%) 순으로 나타났다. 'TV/라디오'의 영향력은 가장 높기는 하지만 '신문/잡지와 합친 전체 언론매체' 영향력은 2015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포털사이트', '인터넷법령·판례 검색시스템', SNS와 같은 다양한 인터넷 활용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60.1%),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57.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차별'(51.5%)과 '북한 탈북자에 대한 차별'(52.3%)은 유사한 수준의 동의를 보인 반면, '남성에 대한 차별'(32.7%)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동의 수준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현재의 범죄 처벌 수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92.3%), '소년 범죄'(92.0%), '성 범죄'(91.3%), '기업의 탈세 관련 범죄'(90.1%)의 처벌 수준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 구성원들의 준법 수준은 '잘 지킨다'는 비율이 73.9%로 높게 조사되었으나 본인의 준법 수준과 비교 시 본인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준법 정도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 준수 정도는 '학교'가 6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동자'(67.2%), '행정부'(53.6%), '자영업자'(51.9%)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대기업'(26.7%), '국회'(24.0%), '중소기업'(40.0%), '검찰'(41.4%)의 법 준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법 준수 정도 (n=3,441, %)

구분	부정적 (%)	평균 (%)	긍정적 (%)	기타 (%)
대기업은 법을 잘 지킨다	19.7	53.6	24.5	2.1
부정적 73.3%	평균 36.3%	긍정 26.7%		
중소기업은 법을 잘 지킨다	9.9	50.1	35.4	4.6
부정적 60.0%	평균 44.8%	긍정 40.0%		
자영업자는 법을 잘 지킨다	6.5	41.6	46.2	5.7
부정적 48.1%	평균 50.4%	긍정 51.9%		
노동자는 법을 잘 지킨다	4.1	28.6	58.2	9
부정적 32.8%	평균 57.5%	긍정 67.2%		
노동조합은 법을 잘 지킨다	7.4	44.7	43.4	4.5
부정적 52.1%	평균 48.3%	긍정 47.9%		
학교는 법을 잘 지킨다	3	28.5	57.1	11.3
부정적 31.5%	평균 59.0%	긍정 68.5%		
행정부는 법을 잘 지킨다	6.6	39.8	46.3	7.2
부정적 46.4%	평균 51.4%	긍정 53.6%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잘 지킨다	6.6	42.1	45.9	5.4
부정적 48.7%	평균 50.1%	긍정 51.3%		
경찰은 법을 잘 지킨다	6.9	42.6	44.6	5.8
부정적 49.6%	평균 49.8%	긍정 50.4%		
검찰은 법을 잘 지킨다	13.3	45.4	35.9	5.5
부정적 58.6%	평균 44.5%	긍정 41.4%		
국회는 법을 잘 지킨다	35.2	40.8	21.4	2.6
부정적 76.0%	평균 30.4%	긍정 24.0%		
법원은 법을 잘 지킨다	9.3	41.3	44	5.4
부정적 50.7%	평균 48.5%	긍정 49.3%		



III. 조사의 한계

2019 국민법의회식 실태조사는 조사문항의 객관화에 기반한 국가통계작성 승인으로 향후 정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시계열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의 축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의 출발선에 있으며, 기존 조사에서 계속 유지되었던 문항을 검증·변경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앞으로 2019 국민법의회식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법의회식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9 국민법의회식 실태조사는 조사문항의 객관화에 기반한 국가통계작성 승인으로 향후 정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시계열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의 축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의 출발선에 있다.”